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은설¹⁾

요약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규정은 있으나 관리시스템이 미비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선행연구와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해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방안에 대한 근거를 전문가, 공무원 및 현장 관련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분석에서 찾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수교육의 문제점은 교육과정 교과목의 획일성, 교육시간부족과 대체교사 활용성 미비, 접근성 부족, 행정 미비 등이며,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보수교육 교육내용의 다양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수강 저축제, 보수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평가인증을 통한 관리 강화, 교육 시간과 기간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승급교육, 직무교육

I. 서론

2013년 우리나라는 영유아 전연령 무상보육 시대를 열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 모든 아동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국가 정책에서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고 어린이집은 막대한 국가 지원금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 정책의 한 축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떠맡은 어린이집에 대해 미래 우리나라 주역들을 바르게 잘 키워야 한다는 책무감과 부담감을 더욱 크게 부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노력하

* 본 논문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보육교직원의 효율적인 보수교육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의 일부를 발췌, 수정, 보완한 것임.

1)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고 있으며 그 산물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문희·유해미·이세원, 2010; 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 2011; 서문희·신희연·송신영, 2009; 유희정·이은혜·최정운·김문정, 2007). 특히 보육 활동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보육 수준을 높이하고자 하는 측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누리과정 교사를 위한 수당, 영아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등이 이러한 시도에 속한다. 그러나 보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말을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이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역량 제고이다(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2009; 유희정·문무경·원명순·김애리·김홍희, 2007; 유희정·이미화, 2004).

보육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교사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며,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간 보육교사의 자격 제도와 양성과정의 개선을 위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온 편이나, 보육교사의 재교육 제도, 즉 보수교육의 적합성이나 개선안에 대한 정책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해 왔다(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 2009; 서문희·박지혜·최진원, 2005; 이미화·장명립·신나리·김문정·김현철, 2006). 양성과정과 자격기준 등의 조건이 새로운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측면이라 본다면 보수교육 과정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인력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므로 보수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보육 현장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지 고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내용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살펴보고, 보수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2.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현행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3. 보수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자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내용 수행을 위해 관련 법, 기관 발간 자료 등 문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문제를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를 수렴·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관련자 인식 조사는 2011년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대학/전문대/보육교사단기양성기관 교수 등 보육전문가 100명, 보육업무담당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100명, 어린이집 원장 162명, 보육교사 138명 등 보육관계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사의 진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의 협조를 얻어 보육전문가와 전국 보육공무원의 명단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명부를 구하였으며, 이들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제도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수교육은 ‘보육교사와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현직교육’이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위한 보수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유형과 내용, 교육기관 현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보수교육의 유형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수교육은 크게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상위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하는 승급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직무교육은 보육교사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40시간 수강이 원칙이다(영유아보육법 제20조). 직무교육은 다시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가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보육교사 직무교육, 원장 임용 첫 해²⁾ 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재교육인 신규원장 직무교육, 또한 현직 원장으로서 정기적으로 매 3년마다 받게 되는 원장 직무교육이 있다. 특별직무교육은 3가지 종류로,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에 대한 직무교육이 있으며 각각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나 원장,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나 원장, 그리고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이 그 대상이 되고 각각 40시간 교육이 이

2) 2014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임용 직전 필수 교육과정으로 전환됨.

루어진다.

승급교육은 각각 3급 또는 2급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고, 모두 80시간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2급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이수 가능하며, 1급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2년의 보육경력을 쌓은 경우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관련 자격이 있더라도 교육 실시 시기에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자격 기준에서 ‘보육업무 경력’이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육정보센터 근무, 또는 종일제 유치원에서의 교직원 근무 경력도 포함하는 용어이다.

2. 보수교육의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0조는 보수교육의 내용에 대해,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6개 범주를 영역으로 두고 각 영역에서 교육대상이 보육교사인지 원장인지에 따라 중점 내용에 조금씩 변화를 주며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직무교육 내용상의 유사점에 대한 문제점은 그간 지적되어 온 바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표준보수보육과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교과목을 개정하고 표준 기준을 제시하였다(한국보육진흥원, 2010).

보수교육의 내용은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 그리고 승급교육으로 나누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바, 직무교육은 총 40시간 이수로 규정되어 있어 6개 영역 20개 또는 24개 과목을 교육함으로써 한 영역 당 4~10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승급교육의 경우는 80시간으로 각 6개 영역에 대해 3~5 과목씩 총 20개(2급 승급은 21개) 과목을 배정하고 영역당 8~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승급교육의 경우는 특히 모든 과정이 종료된 후 평가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

최근 새로이 개정된 보수교육 교육과정의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보육기초’에 보육교사 또는 보육원장의 ‘역할과 윤리’라는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권리 이해’라는 과목과 더불어 보육시설 현장의 아동 보호와 교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직무교육에서 ‘안전관리와 응급 처치’도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3. 보수교육 기관 현황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3조).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수료를 파악하여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위탁교육기관으로는 2011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이 64개 지정되어 있고 일반 대학교가 23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재)한국보육진흥원이 보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총 88개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교육기관 중 72.3%가 보육교사교육원이라고 볼 수 있다.

4. 보수교육 지원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0시간 직무교육의 경우 1인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급교육 80시간에 대해서는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가 허용하는 한에서 그러하며 규정상 예산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부담을 용인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지자체는 연초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기관이 교육 이수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고보조금신청을 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수교육 비용을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여건을 인정하여 실제로는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교육비용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2013년 중앙정부 예산(자격관리 포함)은 5,054백만원이다. 여기에 이 분야 지방정부 예산을 총합하면 두 배 가까운 예산액이 될 것이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사 연수 비용이 크게 포함됨으로써 그 전 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비용이다.

그러나 특별직무교육의 경우 많은 교육생들은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보수예산에서 비용을 지원받기 보다는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교육비 환급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어, 실제로 보육예산에는 특별직무교육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Ⅲ.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제도의 문제점

선행연구와 관련 공무원 면담 분석을 통해 현행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수교육 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 교육과정 교과목의 획일성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현행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이 원장이나 교사의 경력, 직위, 요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구현아·임양미·이기선, 2009; 지성애, 2007; 김의향·서문희·임양미·민미희, 2010, 황해익·박성미·김정신·박선훈, 2008). 표준보수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일반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에서 동일한 6개 영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교과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한 신규 2급 보육교사가 만 2년이 지난 후 1급 승급을 위해 승급교육을 받는다면 이 때 이 교사는 80시간의 1급 승급교육을 받게 되고, 이후 다시 만 2년이 지나 3년차가 되었을 때 일반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급 승급교육과 3년 후 40시간의 일반직무교육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역이 같을 뿐 아니라 교과목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만 다만 시간에서 두 배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보수교육에서 각 20개 과목 중 8개 과목의 명칭이 거의 동일하고 그 나머지에서도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급 승급교육을 받고 만 2년 후 일반직무교육을 받게 된 교사는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연속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 되어 수업은 오히려 피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보수교육의 내용에 흥미를 갖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적극적이지 못한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수강생 자료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승급교육 및 특별직무교육을 1회 받았지만, 일반직무교육의 경우 39%정도가 2회 이상 반복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다. 현직 보육시설종사자들은 3년에 한 번씩 일반직무교육을 받으므로 현직종사자들은 3년에 한 번씩 반복교육을 받는 셈이다. 그렇지만 현재 교육과정은 반복수강생과 첫 수강생 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다. (구현아 등, 2009: p.15-16).

따라서 승급교육과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보육원장 신규 직무교육 등 대부분 보수교육 과정이 내용상 겹치고 있다는 것은 수강자들의 교육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자체를 의무적인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형식적 제도로만 여기게 하여 의도된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의향 등(2010)의 연구에서는 보수교육의 내용이 수강생의 직급이나 보육시설의 근무경력에 따라 달라야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방안이 보수교육 교육과정이 가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육교사의 시간부족과 대체교사 활용의 어려움

보육교사들의 의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실적 어려움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보수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의 8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우리나라 보육 실정에서 볼 때 저녁시간에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은 교사들에게 업무 과중을 부과하는 격이고 주말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교사처럼 일정 기간의 방학이나 연수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보육교사에게 있어 근무 일 내 근무 시간 이후 일정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구현아 등(2009)의 연구를 보면, 경기도 보육교사 355명에게 보수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51.8%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의향 등(2010)의 연구에서도 보수교육 참여 저해 요인으로서 교사와 원장 3,785명 중 43.5%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꼽았다. 참고로 이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그러나 근무 시간 중에 어린이집을 벗어나 보수교육을 받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보육을 받는 영유아의 입장에서 담당 교사의 부재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 기간 중 대체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체교사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또한 보수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보육교사들은 업무과중으로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고 근무시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만 대체 인력 활용이 어려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표 1〉 보수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

단위: %(명)

구분	선행연구 1 ¹⁾	선행연구 2 ²⁾
보수교육 내용이 업무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5.4	11.0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보수교육 참여 시간이 부족하다	51.8	43.5
원장이 참여를 꺼린다/동료교사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	2.8	15.7
대체교사를 쓰기가 어렵다	31.5	20.6
기타	8.5	9.2
계	100.0(355)	100.0(3,785)

주: 1) 구현아 등(2009). 경기도 보육교사 재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2), 1-22.

2) 김의향 등(2010).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6), 405-483.

3. 보수교육기관의 접근성

현재 보수교육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을 제외하면 모두 보육교사교육원이거나 일부 관련 대학들이다. 이러한 기관은 대부분 규모가 있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보육시설 근무 보육교사들은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의향 등(2010)의 연구에서 보면, 보수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운영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근무하는 보육시설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나타났다. 구현아 등(2009) 또한 근무하는 보육시설과의 거리 또는 집과의 근접성 등이 보수교육기관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보고하였다.

〈표 2〉 보육교사의 참여를 저해하는 보수교육 운영 요인

단위: 명(%)

구분	응답빈도(%)
근무하는 어린이집과의 지리적 거리	1,639(44.3)
수강자 수의 과다	291(7.9)
동하절기 냉난방 시설 부족	79(2.1)
식사, 급수 시설 불충분	555(15.0)
책상과 의자의 불편함	764(20.6)
기타	373(10.1)
계	3,785(100.0)

자료: 김의향 등(2010).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6), 405-483.

〈표 3〉 보수교육기관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단위: %(명)

구분	응답빈도(%)
근무하는 어린이집과의 지리적 근접성	192 (47.4)
집과의 지리적 근접성	119 (29.4)
보수교육의 내용	62 (15.3)
보수교육 강사의 명성	14 (3.5)
기타	18 (4.4)
계	405 (100.0)

자료: 구현아 등(2009). 경기도 보육교사 재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2), 1-22.

2013년 현재 보수교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都)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수는 총 50개이다. 이중 시 지역에 속한 곳이 46개이고 4개가 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즉 92%가 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육기관인 것이다(표 4). 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 교육 참여는 매우 어려울 것임을 짐작케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보수교육기관은 춘천에 1곳, 강릉에 1곳이 있다. 전체 행정 시군이 18개임을 감안하고 강원도의 면적을 고려하면 두 도시 인근에 위치하지 않은 곳의 교사들은 교육을 받는 것이 접근성의 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교육기관 수를 늘리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4〉 전국 10개 도 지역 보수교육기관 소재 시·구별 현황

도	행정 시군 수	보육교사 수	보수교육 교육기관 수	보수교육 교육기관 소재 시군 수
경기도	27시 4군	43,437명	21	시20 군1
강원도	7시 11군	4,690명	2	시2 군0
충청북도	3시 9군	5,408명	3	시2 군1
충청남도	7시 9군	6,687명	4	시4 군0
전라북도	6시 8군	7,251명	2	시1 군1
전라남도	5시 17군	6,255명	3	시2 군1
경상북도	10시 13군	9,260명	7	시7 군0
경상남도	8시 10군	12,577명	6	시6 군0
제주도	2시 2군	3,142명	2	시2 군0
계	75시 81군	98,707명	50	시46 군4

4. 보수교육 시간 및 기간의 적절성

현행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승급교육의 경우 80시간을 필수로 하고 있고 직무교육의 경우는 40시간 이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시간은 주간 혹은 야간을 이용한 평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주말 강의로 구성되기도 한다. 교사의 경우 평일 야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40시간 또는 80시간을 4~8시간씩 일정 기간 동안 연속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교육은 진행된다.

보육교사와 유사한 직종으로 간주되고 있는 유치원교사의 경우는 승급을 위한 교육(자격연수)이 30일 이상 180시간 이수로 규정되어 있고 원장 자격연수의 경우는 50일 이상 360시간 이수를 규정하고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보수교육의 이수 시간 수에 대해 이미화 등(2008)은 교사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관점에 볼 때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 참여에 대한 현실적 장애물들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나 원장들은 교육 시간이 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한 교육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보수교육에서 논의되어야 할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다.

〈표 5〉 보수교육 교육시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단위: %(명)

구분	선행 연구 1 ¹⁾	선행 연구 2 ²⁾
짧다	3.9	3.2
적절하다	39.8	42.6
길다	56.3	54.2
계	100.0(3820)	100.0(408)

주: 1) 김의향 등(2010).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6), 405-483.

2) 구현아 등(2009). 경기도 보육교사 재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2), 1-22.

5. 보수교육 행정의 미비

공무원들이 지적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수교육의 측면은 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보육교사의 자격은 제도적으로, (재)한국보육진흥원 내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총괄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자격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 승급 시 필요한 승급교육 이수 증명이 제출되면 보육인력개발국은 승급된 자격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일면 승급교육은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승급이 아닌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보수교육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거든요. 개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신청하지 않는 한 아무도 관심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수교육 기간이 임박하면 누가 대상인지를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담당 공무원 면담)

이미화 등(2008)의 연구에서도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 각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과 대상선정, 이수 통계 등에 대한 관리가 중앙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미화 외, 2008: 246)

그러므로 보수교육 전체를 관리하고 개인별 이수 기록 등이 반영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가 없음으로 인해 보수교육, 특히 직무교육에 대한 의무감이 없고 교육 이수에 대한 기대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도 느슨하게 진행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보수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행정 관리체계가 단시일 내에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IV. 보수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분석

앞 장에서 제시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서론에서 밝힌 바처럼,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 관련자 등 총 500명이다.

1.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보수교육관련 전문가·공무원·현장관련자를 대상으로 현행 보수교육의 관리, 보수교육 비이수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시행되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효과성 등 현행보수교

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첫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전체 35.7%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33.9%가 ‘아니다’라고 답하였으며, 14.7%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여 전체 48.6%만이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표 6 참조).

〈표 6〉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됨	별로 안됨	보통	조금 되는 편	매우 잘됨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14.7	33.9	35.7	13.9	1.8	100.0(498)	2.54(0.96)	
응답자 유형								
전문가	6.1	23.5	43.9	23.5	3.1	100.0(98)	2.94(0.92) ^a	10.98***
공무원	8.0	30.0	46.0	15.0	1.0	100.0(100)	2.71(0.86) ^a	
원장	20.4	41.4	25.3	11.1	1.9	100.0(162)	2.33(0.98) ^b	
교사	18.8	35.5	34.8	9.4	1.4	100.0(138)	2.39(0.95) ^b	

*** $p < .001$, $a \neq b$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비이수자에 대한 실제적인 행정적 제재가 거의 없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전체 43.6%가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28.8%가 ‘그렇다’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6.0%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유형별로는 전문가의 47.3%는 ‘그렇다’로 행정적 제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공무원 39.4%, 보수교육 참여자인 원장 48.1%와 교사 54.7%는 ‘아니다’로 답하여 행정적 제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표 7〉 보수교육 비이수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의 실천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강한 편	매우 강력함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9.0	43.6	16.0	28.8	2.7	100.0(489)	2.73(1.06)	
응답자 유형								
전문가	6.6	23.1	19.8	47.3	3.3	100.0(91)	3.18(1.04) ^a	9.31***
공무원	6.1	39.4	20.2	32.3	2.0	100.0(99)	2.85(1.01)	
원장	12.3	48.1	10.5	27.2	1.9	100.0(162)	2.58(1.07) ^b	
교사	8.8	54.7	16.8	16.1	3.6	100.0(137)	2.51(0.99) ^b	

*** $p < .001$, $a \neq b$

셋째, 현재 시행중인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은 효과적이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5.2%가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25.7%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2.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44.2%가 현재 시행중인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편이며, 33.7%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은 54.1%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고, 원장과 교사는 비슷한 비율로 각각 51.2%, 48.6%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는 16.5%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현재 시행중인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의 효과성

단위: %(명), 점(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음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8.1	25.7	22.0	35.2	9.1	100.0(495)	3.12(1.13)	
응답자 유형								
전문가	25.8	33.0	24.7	14.4	2.1	100.0(97)	2.34(1.08) ^a	21.33 ^{***}
공무원	3.1	17.3	25.5	46.9	7.1	100.0(98)	3.38(0.96) ^b	
원장	3.7	27.8	17.3	39.5	11.7	100.0(162)	3.28(1.10) ^b	
교사	4.3	23.9	23.2	36.2	12.3	100.0(138)	3.28(1.09) ^b	

^{***} $p < .001$, $a \neq b$

2. 보수교육 개선안에 대한 의견

가. 보수교육 ‘수강 저축제’

보수교육을 시간분할로 누적 이수할 수 있게 허용하는 ‘수강 저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1%가 ‘그렇다’, 20.1%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78.2%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평균 3.84점으로 나타나 보수교육의 저축제 도입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보수교육 수강 저축제를 도입할 시 교육 분할 이수 완료 허용 기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1년 이내에 수료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34.2%로 가장 많았고, 2년 이내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 6개월 이내에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은 21.2%, 3년 이내에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9〉 보수교육 수강 저축제 도입 필요성 인식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불필요	거의 불필요	보통	조금 필요	매우 필요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1.8	10.9	9.1	58.1	20.1	100.0(497)	3.84(0.93)	
응답자 유형								
전문가	7.1	16.3	12.2	48.0	16.3	100.0(98)	3.50(1.16) ^a	7.64***
공무원	1.0	11.0	13.0	63.0	12.0	100.0(100)	3.74(0.85)	
원장	0.0	8.6	4.9	61.7	24.7	100.0(162)	4.02(0.80) ^b	
교사	0.7	9.5	8.8	57.7	23.4	100.0(137)	3.93(0.88) ^b	

*** $p < .001$, $a \neq b$

〈표 10〉 보수교육 수강 저축제 분할 이수 완료 기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3년 이내 이수완료	2년 이내 이수완료	1년 이내 이수완료	6개월 이내 이수완료	기타	계
전체	19.6	24.4	34.2	21.2	0.6	100.0(500)
응답자 유형						
전문가	15.0	34.0	31.0	17.0	3.0	100.0(100)
공무원	13.0	27.0	44.0	16.0	0.0	100.0(100)
원장	21.0	20.4	27.8	30.9	0.0	100.0(162)
교사	26.1	20.3	37.0	16.7	0.0	100.0(138)

주: 셀의 기대치가 0인 비율이 높아 χ^2 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나. 보수교육 교과 일부의 온라인교육 방식 전환

‘일반직무교육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3.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근소한 차이로 31.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일반직무교육의 온라인 실시 전환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표 11〉 일반직무교육 온라인화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비효율	비효율	보통	효율적	매우 효율적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9.4	33.1	18.0	31.3	8.2	100.0(499)	2.96(1.16)	
응답자 유형								
전문가	33.0	42.0	15.0	9.0	1.0	100.0(100)	2.03(0.97) ^a	32.06***
공무원	7.1	27.3	23.2	35.4	7.1	100.0(99)	3.08(1.09) ^b	
원장	2.5	31.5	16.7	38.3	11.1	100.0(162)	3.24(1.09) ^b	
교사	2.2	32.6	18.1	36.2	10.9	100.0(138)	3.21(1.08) ^b	

*** $p < .001$, $a \neq b$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승급교육에 대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1.1%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23.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의 응답을 집계하면 55.3%로 과반수 이상이 승급교육의 온라인 교육 전환 시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교육은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해도 된다는 허용적인 인식이 있는 데 비해 승급교육은 직무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두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수업효과가 높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 12〉 승급교육 온라인화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비효율	비효율	보통	효율적	매우 효율적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14.2	41.1	14.8	23.8	6.0	100.0(499)	2.66(1.16)	
응답자 유형								
전문가	36.0	44.0	11.0	9.0	0.0	100.0(100)	1.93(0.91) ^a	18.82***
공무원	7.1	42.4	21.2	24.2	5.1	100.0(99)	2.78(1.06) ^b	
원장	9.3	42.0	13.6	27.8	7.4	100.0(162)	2.82(1.16) ^b	
교사	9.4	37.0	14.5	29.7	9.4	100.0(138)	2.93(1.19) ^b	

*** $p < .001$, $a \neq b$

다. 보육교사의 경력 및 업무에 따른 보수교육과목 다양화

보육교사의 경력 및 업무에 따른 보수교육과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60.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32.8%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5점 척도에서 평균 4.23점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대다수인 93.6%가 보육교사의 경력 및 업무에 따른 보수교육과목의 다양화가 필요함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보육교사의 경력 및 업무에 따른 교육과목의 다양화 필요성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0.4	2.8	3.2	60.8	32.8	100.0(497)	4.23(0.68)	
응답자 유형								
전문가	1.0	4.0	5.0	52.0	38.0	100.0(100)	4.22(0.80)	4.37**
공무원	1.0	2.0	6.1	75.5	15.3	100.0(98)	4.02(0.63) ^a	
원장	0.0	3.1	2.5	58.4	36.0	100.0(161)	4.27(0.66) ^b	
교사	0.0	2.2	0.7	59.4	37.7	100.0(138)	4.33(0.61) ^b	

** $p < .01$, $a \neq b$

안전교육, 표준보육과정 등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4%가 ‘그렇다’, 18.8%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76.2%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5점 척도에서 평균 3.79점으로 나타나 안전교육, 표준보육과정 등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안전교육, 표준보육과정 등의 보수교육 포함 필요성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1.4	13.4	9.0	57.4	18.8	100.0(500)	3.79(0.95)	
응답자 유형								
전문가	4.0	14.0	11.0	57.0	14.0	100.0(100)	3.63(1.02) ^a	15.28***
공무원	0.0	26.0	19.0	52.0	3.0	100.0(100)	3.32(0.90) ^a	
원장	1.2	10.5	4.9	57.4	25.9	100.0(162)	3.96(0.92) ^b	
교사	0.7	7.2	5.1	61.6	25.4	100.0(138)	4.04(0.81) ^b	

*** $p < .001$, $a \neq b$

라. 보수교육 이수 시간 및 시기 조정

보수교육을 2년마다 20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42.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4.4%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2.2%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절반이상(51.0%)의 응답자가 보수교육을 2년마다 20시간으로 조정해야한다는데(‘그렇다’ + ‘매우 그렇다’) 동의하였다.

〈표 15〉 보수교육 2년마다 20시간으로 조정 필요성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2.4	24.4	22.2	42.1	8.9	100.0(496)	3.31(1.01)	
응답자 유형								
전문가	3.1	17.3	26.5	41.8	11.2	100.0(98)	3.41(1.00)	2.22
공무원	5.1	19.4	27.6	44.9	3.1	100.0(98)	3.21(0.97)	
원장	1.9	33.3	16.7	40.7	7.4	100.0(162)	3.19(1.04)	
교사	0.7	22.5	21.7	42.0	13.0	100.0(138)	3.44(1.00)	

마. 보수교육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활용 사업 확대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지원을 위해 대체교사활용 사업을 확대해야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48.6%가 ‘그렇다’, 41.0%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체교사활용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와 원장은 각각 51.0%, 48.8%로 ‘매우 그렇다’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공무원과 교사는 각각 59.0%, 51.4%로 ‘그렇다’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긍정적 인식정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16〉 보수교육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사업 확대 필요성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6.2	4.2	48.6	41.0	100.0(500)	4.24(0.80)	
응답자 유형							
전문가	1.0	4.0	44.0	51.0	100.0(100)	4.45(0.63) ^b	14.52 ^{***}
공무원	13.0	11.0	59.0	17.0	100.0(100)	3.80(0.88) ^a	
원장	7.4	1.2	42.6	48.8	100.0(162)	4.33(0.83) ^b	
교사	3.6	2.9	51.4	42.0	100.0(138)	4.32(0.70) ^b	

^{***} $p < .001$, $a \neq b$

바. 정부의 보수교육 지원 단가 인상

‘현재 정부의 보수교육 지원 단가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전체 중 4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6.1%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21.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5점 척도에서 평균 3.82점으로 나타나 정부의 보수교육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보수교육 정부지원 단가 인상 필요성 인식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표준편차)	F/t
전체	0.2	10.9	21.6	41.2	26.1	100.0(495)	3.82(0.95)	
응답자 유형								
전문가	0.0	3.1	9.2	40.8	46.9	100.0(98)	4.32(0.77) ^a	36.69 ^{***}
공무원	1.0	26.5	41.8	25.5	5.1	100.0(98)	3.07(0.88) ^b	
원장	0.0	4.9	25.9	46.3	22.8	100.0(162)	3.87(0.82) ^c	
교사	0.0	12.4	10.9	46.7	29.9	100.0(137)	3.94(0.95) ^c	

^{***} $p < .001$, $a \neq b \neq c$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보수교육의 문제점과 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보수교육 교육내용의 다양화

가. 보수교육 인정 과목 범위 확장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은 2009년 표준보수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이듬해부터 적용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이 표준보수교육과정은 일률적인 교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 직무교육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범위를 늘려주는 정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보육교사 및 원장들은 보수교육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보육정보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갖고 있다. 교육 내용은 보육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표준보육과정이나 위생 및 안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육기회가 충분하지 못했을 부분은 필수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서울의 경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 정보화 교육, 다문화 보육 이해 등의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어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대부분 1년간 교육 계획을 연초에 제시하고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육 시기나 횟수도 다양하게 달라, 수강자의 선택 폭이 넓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보면, 안전교육이나 표준보육과정 등의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포함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76.2%가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고 현장의 원장이나 교사가 전문가나 공무원보다는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의 경우에도 72%가 보육정보센터의 이러한 교육들이 보수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8%만이 동의하지 않았다. 보수교육 내용의 다양성 측면뿐 아니라 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일부를 보육교직원들의 보수교육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만하다.

나. 보수교육 교과목의 다양화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6%가 보수교육 과목을 현행과 달리 다양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교수나 현장의 원장, 교사들 간 응답에서 차이가 없으며 다만 공무원들은 조금 낮은(90.8%) 비율로 찬성하나, 이 또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다. 즉, 보수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른 어떤 사안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목들로 현행 교과목이 대체될 수 있을지는 보다 심도 깊게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대체 과목들은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교육내용이나 유치원교사들이 직무연수의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교육내용들이 있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는 교과목의 다양화라는 안이 승급교육보다는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개선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승급교육은 필수교육으로서 무엇보다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1급 또는 2급, 혹은 원장 자격소지자는 동일한 수준의 승급과정을 거쳤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 승급교육 과정 내용의 적절성과 개편 방안은 보수교육 자체의 의미와 의의를 먼저 논해야하는 교육과정철학적인 논의이므로 본 연구의 관심사를 벗어났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범위를 직무교육 교과목으로만 한정해 제시할 수 밖에 없다.

2. 보수교육 참여 시간 부족과 교육기관 접근성 해소

가.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데에는 보육교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교육 시간을 내기 힘들고 당사자의 부재 시 그들을 대체할 대체 인력이 활용 가능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작용한다. 보육교사들이 업무시간 이후 저녁시간에 교육을 받거나 주말을 이용해 받는 것도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과도한 피로감에 더해, 유치원 교사의 경우 일정 기간 연수를 근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방학 등을 이용하여 장기 재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교육기관까지 오가는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무지를 최소 기간 떠나있게 함으로써 대체교사 미이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보수교육 중 특별직무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다(이미화 외, 2009).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온라인 교육의 범위는 역시 직무교육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을 온라인화 하는 데에는 보육교사의 47.1%가 동의하였고 34.8%가 반대하였다. 승급교육의 온라인 교육화에는 교사의 39.3%가 찬성하고 4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80%가 승급교육의 온라인화에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앞서의 제안들과 마찬가지로 승급교육이 아닌 직무교육에만 적용되는데 많은 이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보수교육 수강 저축제

보수교육 참여 시간의 불충분성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 ‘수강 저축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제도는 보수교육을 단기간 동안 모두 40시간, 80시간씩 연속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기간 내에 수강자가 자유롭게 수업을 나누어 이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만일 보육교사들이 승급교육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2주간 80시간을 온전히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면 보육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대체교사 활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을 받는 영유아의 입장에서도 2주간의 담임교사 부재는 좋지 않는 보육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수교육 수강 저축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보수교육을 조금씩 나누어 수강함으로써 보육교사나 영유아, 보육원장 모두에게 최소한의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제도는 본 연구의 조사에서 볼 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이었다. 응답자가 모두 높은 비율로 동의를 보인 가운데 특히 보육원장의 경우 86.4%가 찬성하였고 보육교사는 81.1%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승급교육과 직무교육 할 것 없이 모두 수강 저축제를 적용하는 데 가장 많은 수가 동의하였다. 교사들이 최소한의 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모든 보수교육을 평일 주간 시간을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도 이 제도의 의의가 있다.

3. 보수교육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수교육 체계의 문제 중 하나는 보육교사 및 원장 개인별 보수교육 이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승급의 경우는 승급교육 이수 증명과 개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

보육진흥원에서 승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후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이수 보고를 하는 선에 끝이 나고 전국적으로 개별 사항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비체계적인 측면이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해이하게 하고 행정적인 제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전국 시스템에서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교사 개인별 이력에 대한 관리 및 지속적 교육에 대한 감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전국적인 행정 관리의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보육시설평가인증의 한 가지 지표가 되고 있는 보수교육 미이수교사 채용 여부에 대해 단순히 평가인증 점수에서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정확히 e-보육을 통해 각 시설의 현황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만일 태만한 보수교육 이수 현황이 드러나게 되면 지자체에 고지하여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 평균 채용 기간이 길고 보수교육 이수 우수 결과를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의 우선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도 장려 방안이 될 수 있다.

4. 보수교육 시간과 기간의 개선

현행 보수교육의 법정 규정 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음은 익히 지적되어 왔다(이미화 외, 2008).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이 부족하고 애착이 중요한 영유아기에 교사가 장기간 부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예산 또한 증액 확보되어야 하므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무리한 사안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다수(61.1%)가 현행 승급교육시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수들은 80%가 적절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는 여러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의견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과 지원이 향상된 이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구현아·임양미·이기선(2009). 경기도 보육교사 재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2), 1-22.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 김문정(2009).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
- 김의향·서문희·임양미·민미희(2010).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6), 405-438.
-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박지혜·최진원(2005).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준 연구. 서울: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 2005-16.
-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서울: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유해미·이세원(2010). 저소득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효과 연구. 한국여성재단.
- 유희정·문무경·원명준·김애리·김홍희(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유희정·이미화(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유희정·이은혜·최정운·김문정(2007).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미화·김경희·김문정(2008). 육아지원인력의 재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김경희·김문정(2010).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177-205.
- 지성애(2007). 보육교사 보수교육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유아교육학논집, 11(3), 155-180.
- 지성애(2010). 보육시설장의 자격 강화와 전문성 확장을 위한 대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 61(4), 63-88.
- 한국보육진흥원(2010). 표준보수교육과정.
- 황해익·박성미·김정신·박선훈(2008). 보육교사 승급보수교육에 대한 교사와 원장의 인식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53(6), 173-198.

·논문접수 3월 31일 / 수정본 접수 5월 31일 / 게재 승인 6월 17일

·교신저자: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메일 eskim@kicce.re.kr

Abstract

Improving the In-service Education for Teachers and Directors of Childcare Centers

Eunseol Kim

This study aims to search weaknesses of the current system of in-service education for childcare staffs and provid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m.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nd an interview with an government official, the weaknesses are defined as insufficient subjects in curriculum, inadequate time for getting the education, shortage of substitute teachers, and limitation in accessibility to the educational sites. The present study proposes several strategies as follows: to vary the curriculum of in-service education, to introduce on-line learning to general job education part and a credit saving system in order to ameliorate the limited accessibility, to build a total management system of the in-service education, and to modify the time and duration of the education.

Key words: childcare, childcare teachers, in-service education for childcare staffs